

개성과 미사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영희 /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들어가며

북한은 왜 세계 여론의 악화를 무릅쓰고, 중국까지도 반대하는 인공위성이 라는 이름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 하는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버린 2009년 4월 이후의 6자회담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고 또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응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동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의 동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추측이 지배적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미국 정부 압박을 위함 수단

첫 번째가 미국 오바마 정부에 북미협상에 빨리 응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라는 해석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내내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그가 말한 불량국가는 북한과 이란과 시리아다. 이란과의 협상 목적은 북한과의 협상 목적과 같다.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다. 시리아와의 대화는 이라크와 레바논 등 중동의 과격한 이슬람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 목적은 설명이 필요 없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2005년의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간 합의로 이루어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현재 2단계의 불능화를 거의 끝내고 3단계인 핵 폐기의 수순으로 들어갈 문턱에 발을 걸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시설 신고를 둘러싼 의견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단계에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대북 협상을 담당하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가 교체되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에 큰 기대를 걸었음직 하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뉴욕발 금융경제위기가 터져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오바마의 관심과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옮겨갔다. 설상가상으로 대외정책에서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작은 전쟁을 벌여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은 다시 뒤로 밀리는 것 같이 보였다. 북한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수퍼 국무장관으로 대외 정책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 클린턴 장관을 보좌하는 국무부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팀이 북한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짜여진 사실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오로지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관여만을 기대한다.

북한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취하는 일련의 도발적인 언행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에 대한 압박의 수준을 넘어 미국의 안보 이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데까지 나가버렸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언제나 강경파와 온건파의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서 한쪽이 약간 우세한 방향에서 추진된다. 부시 정부의 첫 6년은 보수·강경파의 우세로 그 대북 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2006년 핵·미사일 실험을 초래했다.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한 것은 이라크 전쟁 실패로 보수파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온건·대화파의 영향력이 우세하게 된 마지막 2년간이었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온건파의 힘이 약화되어 강경파가 다시 대북 정책의 흐름을 주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전술적인 실수로 큰 전략적인 손실을 입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정부 길들이기 수단

북한 도발의 두 번째 동기는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라는 추측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과 출범 초기에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너무 많이 쏟아냈다. 통일부를 해체하겠다고 말하고, 극우·보수로 분류되는 학자를 통일부장으로 내정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김정일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2000년의 6.15 공동성명과 2007년의 10.4 합의를 계승할 의사가 없다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안티테제(Antithesis)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가 전임 두 정부의 햇볕·포용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북한은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한다. 개성공단 가는 길을 열었다 닫았다를 되풀이 하고, 한국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뽑은 대통령을 역도라고 매도하고, 군복으로 정장한 군인이 TV에 나와서 남북간 정치·군사 합의의 무효를 선언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다.

북한 내부 체제 결속 수단

세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북한 내부의 사정이다. 북한 내부 사정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군부의 정책 주도권 장악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후계 문제다. 북한 군부는 김영삼 정부 때 남한이 주는 쌀을 싣고 청진항에 들어간 남한 선박을 인공기 달지 않았다는 언어도단의 핑계로 억류했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과 개성을 가는 육로를 닦을 때도 북한 군부의 반대로 합의가 많이 지연되었었다. 한국과 미국 포함해서 군부는 어느 나라나 보수적이다. 적대국과 긴장이 있어야 군부의 존재감이 올라간다.

이런 일반론을 넘어서 북한의 군부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절대적인 프리미엄을 누리는 북한 최강의 권력 집단이다. 김정일의 리더십은 군부의 지지라는 바탕 위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선군정치가 그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주 군부대를 시찰하는 것도 그 원인은 선군정치요 결과는 군부의 파워 확인·강화다. 말하자면 김정일 위원장은 군부라는 호랑이 등에 업힌 지도자다. 이것이 그의 딜레마다. 세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권력을 줄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너무 강화시켜 놓은 군부의 힘이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약이면서 독이다.

앞에서 언급한 군의 일반적인 보수 성향과 핵·미사일로 무장하여 집단의 권익을 지키고 싶어하는 북한 군부의 구체적인 욕구가 가장 리얼하게 반영되는 것이 핵·미사일 협상의 일진일퇴요 가장 난폭한 대남 도발적인 언행이다. 김정일이 군에 의존하는 지금의 위기 관리 체제를 어떻게 졸업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의 앞날을 설득력 있게 점칠 수가 없다. 위기 관리 체제라고 할 때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1989~1991년의 동유럽과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이 맞고 있는 체제 위기를 말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아버지 김일성 주석도 1960년대 말 선군정치라는 양면의 칼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했다. 그때의 군부는 김일성 주석과 함께 만주벌판에서 항일 게릴라전을 했던 전우들이었다. 군부는 두 파로 갈렸는데 하나는

빨치산 중에서도 민간인 중심의 갑산파였고, 다른 하나는 현역군인 중심의 만주파였다. 김일성 주석은 1967년에서 1969년 사이에 갑산파와 만주파를 차례로 제거했다. 갑산파가 숙청된 뒤 만주파의 군인들은 군복을 입은 채 당과 정부의 거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1968년 1월의 청와대 기습미수사건과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일으키고, 10월에는 울진·삼척에 대규모 무장 공비를 내려 보냈다. 이듬해에는 미군 정찰기를 격추하기도 했다.

김일성 주석은 자신의 콘트롤 밖에서 망동주의와 모험주의 노선을 걷는 만주파까지 숙청하고 비로소 군부라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있었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꺾 독트린을 선언하고 중국과 평풍외교를 시작으로 데탕트 시대를 열었다. 그때를 맞춰 김일성 주석이 1960년대 판 선군정치를 청산하지 않았다면 대외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대내적으로는 1972년 아들 김정일 위원장을 후계자로 지명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북한 정권에서 강한 대주주 의식,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백전노장들이 김일성 주석의 새파랗게 젊은 아들에게 권력이 세습되는 것을 저항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그의 건강으로 보아 선군정치와 후계구도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호랑이 등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김일성 주석이 누리던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없다. 그가 권력의 세습을 바란다면 군부의 지지에만 의존하는 위기 관리 체제를 털고 당과 내각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핵·미사일은 군부가 거둔 큰 업적이다. 핵·미사일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해와도 일치한다.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도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이 받을 외부의 경제적 보상은 북한의 경제 살리기에 필요할 수는 있어도 체제 안보를 고려하면 오히려 체제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킬 판도라의 상자, 트로이의 목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한국이 도와주겠다는 개혁·개방에 신경질적인 반발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노무현 정부 때는 개혁이라는 용어도 금기로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3000 구상은 북한 입장에서는 마시고 죽으라는 독배(毒盃)나 다름없다.

김정일 위원장은 평도 먹고 알도 먹어야 한다. 핵·미사일 보유로 체제 안보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핵 군축 협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몸값, 지금 가지고 있는 핵 시설과 플루토늄과 미사일에 대한 값이 최고로 쏠린다. 그리고 군부에 대해서도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하와이와 알래스카에 닿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성공

적으로 시험 발사할 경우 북한과의 핵 협상은 지금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이 되어버린다. 북한은 가벼운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가 가벼우면 미사일이 운반할 거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기지를 예방 공격으로 파괴하는 것은 옵션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남는 것은 핵·미사일 비확산(수출금지)로 후퇴하는 것뿐이다. 한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PSI(대량살상무기 방지 구상) 본격적인 참가를 고려한다. 그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는가. 아니다. 거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비유로 설명해 보자. 방화범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 내 집에 불이 붙을 위기의 순간이다. 이웃들이 힘을 합쳐 몇 구간 밖에 방화벽을 쌓는다. 나는 내 집 끄지 않고 방화벽 쌓는 일을 거른다.

PSI 참가를 선언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북한에게 그들이 말하는 인공위성, 우리가 걱정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의 PSI 참가 위협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기시킬 힘을 가졌을까를 물으면 대답은 '아니오'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견제할 효과 보다는 남북한이 해상에서 충돌할 위험이 훨씬 크다. 한국이 PSI 참가를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서해상에서 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차라리 북한이 큰 사고 한번 쳐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마술사가 모자에서 비둘기 꺼내는 묘수는 없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그것이 강한 것이든 부드러운 것이든 북한의 대남, 대외 전략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는 사태가 가장 위험하다.

북한과 계속 대화 재개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안되면 민간단체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시간을 끌면 북한 병기 창고에 핵·미사일의 재고(Arsenal)만 늘어날 것이고, 그럴수록 앞으로의 대북협상의 조건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